# 진실 화해

2024. 봄호 Vol. 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안녕 하세요

저는 이번 진실 화해 위원회에서 억울함을 밝혀주신
신정희 입니다 18세에 국방에서 자다가 잡혀 대밤동
보니 보호소를 거쳐 동부 여자기술원에 가서 1년 넘게살다가
서산 개척단 강제와 강제로 결혼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결혼 하면 사회에 나갈수 있다하여 결혼 2년 만에 탈출
하였습니다 그후로 집에도 갈수 없어 호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저희 억울함을 밝혀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신정희 올림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 원으로 끌려가 총살 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북지역 미군관련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두분 전쟁때 함께 잃은것은 큰 슬픔이고
아픔 이었습니다
서원이 흘러 저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할아버지 아버지는 부르고 본적이 없어요
두분께 명예회복을 해주신 진실화해 위원회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 합니다.

3월 1일
유족자

33년전 김천의 강요 협박 인천유린을 겪고 김천서까지
강제 퇴직당한 후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차순은 30여 년 동안 한맺은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해주셨에 저의 인생길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지금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김천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후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어릴적에 매일밤마다 찾아왔던 악몽 30년
이상을 꿈과자 서북치고밤으로 살아왔던
인생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덕분에 한줄기 빛이 되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 3. 8 이 차 순

※ 신청인들이 보내온 편지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편집자 주).




산촌에 살던 일곱살 어린이가 한국전쟁이란 과물을 만나 양친부모님
포함 가족 11분을 한날한시에 잃고 평생 처절함과 외로움 속에서
백발이 되었습니다.
마디마디 성취의 기쁨도 있었지만 잠시뿐이었고, 전쟁등에 희생된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야말로 저의 평생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를 자라는 길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청 접수된 사건마다 사연이 다 다르고 조사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특히 저의 경우 희생자가 많고 발생지가 산간벽지로 교통이 불편하여
현장 접근이 어려워 장기간 조사로 노고가 많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김애자 조사관님의 저를 조사하시는 도중 제 가족의 처참 당시의
사연을 들려드릴 때 눈시울을 같이 붉혀주신 일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나 있어 변을 당하지나 않았나
주위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할 염려를 말끔히 해소해주셔서
저와 가족과 후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가
길을 터 주었습니다.
이제야 나 혼자가 아니고 옆에 국가가 있음을 실감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형 식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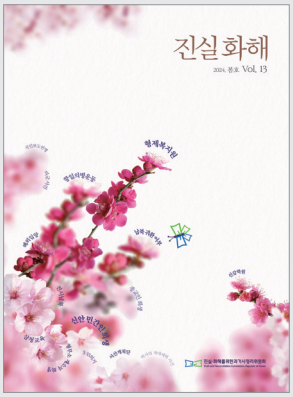
안녕 하세요
저는 23살때 동복여자기술원
으로 잡혀들어가 부모 없고
고아하는 이유로 3년 넘께 갇혀
살다가 사감 선생님 이 소개로
강제로 결혼 하고 서야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웃부남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평생 한으로 남았는데
이제 진실화해 위원 회에서
저의 억울 한을 다 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제 정말 사람
답게 살게 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명숙 올림
2024년 3월 6일

동서고금으로 애꿎은 역사는 어디에나
있었다. 다행한 것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진실화해위원회이다.
그동안 우리 운현대사에도 암담한 고통과
얼룩이 얼마나 많았는가.
조사관들의 숨은 노고와 냉철한 판단으로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어야 할 것이다. 희망찬 미래를 진실
화해위원회에 또 한번 기대해 본다.

2024. 3. 6.
용연재 신상식 올림



# CONTENTS




온 천지에 봄꽃이 가득합니다
겨울을 이긴 꽃들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피어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새 봄과 함께
'진실규명 결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건 조사에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02 **독자와 함께**

06 초점 | 조사기간 연장 확정
"내년 5월까지 조사"
1년 연장으로 진실규명 길 열렸다

11 진실규명 결정 ① | 전남 신안 민간인 희생 사건 직권조사
임자면 304명, 지도읍 52명
적대세력에 희생

13 진실규명 결정 ② |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1)
주민 33명 사망 확인, 4명 부상
민간인 희생 사실 확인

14 진실규명 결정 ③ | 경상권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보도연맹원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 살해

16 진실규명 결정 ④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3)
153명 확인 3차 진실규명…
피해자 자서전 발굴

17 진실규명 결정 ⑤ |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강제 수용 후 초소 설치해 감시
"중대한 인권침해"

18 진실규명 결정 ⑥ |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이윤상 유괴살해범 몰려 고문 끝에 실명
"경찰청 사과와 명예회복 권고"

19 진실규명 결정 ⑦ |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OO)
'오적 필화 사건'
사상계 편집인 진실규명 결정

20 진실규명 결정 ⑧ |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서OO)
민간인 간첩 누명 씌워 전향 강요
"역용공작 드러났다"

21 진실규명 결정 ⑨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심한 고문에 정신이상까지…
"인권은 없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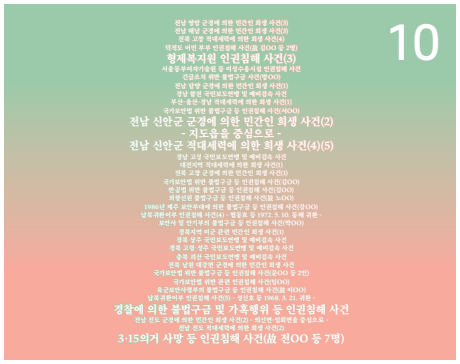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의 국가 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때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근거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20. 6. 9. 개정)
**조사기간** |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2021. 5. 27.) 이후 3년. 2025. 5. 26.까지 조사기간 1년 연장










22 진실규명 결정 ⑩ | 덕적도 어민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내무부 치안국 불법구금·고문 확인
"국가의 사과·재심 권고"

23 직권조사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직권조사 결정

24 연재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실이야기
전남 화순군 도장마을 주민들
"진실을 밝히고 기억합니다"

28 종결 사건 깊이보기 |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우리는 조선의 억센 젊은이"
독립 꿈꾼 8인의 비밀결사대

31 기획 | 3·15의거
진상규명 2년… 밝혀진 사실,
밝혀야 할 진실

34 진실규명 결정 요지
40 권고이행
42 유해발굴
44 사진으로 보는 진실화해위원회
46 위원회 동향
49 주요 언론 보도
50 판결동향
52 해외동향
54 관련 단체 소식

2024. 봄호 Vol. 13

발간등록번호 11-1790558-000012-08

**발행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통권 13호 **편집·취재** 대외협력담당관실
**누리집** www.jinsil.go.kr **주소** (04554)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6층) **전화** 02-3393-9728

※ 칼럼 및 기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1
9 772983 162000
ISSN 2983-1628

조사기간 연장 확정

# “내년 5월까지 조사” 1년 연장으로 진실규명 길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1년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23일 71차 전체위원회에서 올해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기간을 2025년 5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것이다. 과거사정리법 제25조(조사기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의결 이후 4년 후인 내년 5월 26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과거사정리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만료 후 6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1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71차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 71차 전체위원회서 만장일치 의결
> 대통령과 국회 보고 완료
> "과거사 진실규명에 혼신의 힘 쏟겠다"

월간 위원회 활동 전체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025년 11월 말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 2만 92건 접수 "1기 대비 80% 증가"
## 남은 사건 진실규명 속도 낸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된 지 10년 만인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다. 출범 이후 2년간 진실규명 신청사건을 접수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2만 92건으로 80% 증가했다. 조사기간도 조사개시 결정 이후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단축돼 진실규명 신청 접수와 함께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청사건에 대한 사건별 증거자료 확보와 신청인·참고인 등 진술조사의 한계, 조사관 대비 사건 수의 대폭 증가 등 진실규명 처리를 해 나가는 데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제약에 따라 조사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 추진해 왔다. 지난해 5월 2일 열린 55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이 71차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기간연장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와 양당 원내대표 보고를 거친 데 이어 11월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올해 1월 9일 기준으로 신청사건 2만 92건 중 1만 567건(53%)을 처리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사건은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와 유족 등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과거사 진실규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조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인 올해 5월 26일까지 신청사건 처리율은 61% 정도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사기간 1년 연장 확정으로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종료까지 신청사건을 84% 이상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년 11월 말까지 연장되는 활동 기간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사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조사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 처리율이 높아져 피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말까지 사건 처리율 높여 주요 단체사건 진실규명 속도 낸다

조사기간 1년 연장 확정에 이어 올해 주요 추진업무도 확정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6일 72차 전체위원회에서 '2024년 연간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송상교 사무처장이 이날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는 부서별로 주요 핵심 업무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주요 현안과 연계한 현장방문과 지방자치단체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시·도실무협의회 개최로 조사업무와 권고이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정부부처 등과도 신속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유족단체 면담과 간담회를 통한 소통에 더욱 힘쓰고 피해자와 유족, 피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과 위령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관련 실지조사 차원에서 유해발굴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유해발굴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유해발굴 보조사업도 적극 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가족 시료 채취와 유전자




검사 등도 추진하게 된다.

또 진실규명 결정 사건 등 위원회 활동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주요 현안인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배·보상법 입법 활동과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이어갈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운영지원담당관실은 원활한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 증원과 각종 장비 지원을 비롯해 직원 역량 강화, 조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각종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국에서는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5월 말 종료 시점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신청사건 처리율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조사1국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맡고 있다. 남은 사건 8,000여 건 중 73%에 해당하는 6,000여 건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그 결과 전체 1만 7,000여 건 중 1만 4,000여 건을 처리해 올해 말까지 전체 처리율을 87%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중인 조사2국은 3,700여 건 중 2,000여 건을 처리해 55%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남은 1,600여 건 중 올해 안으로 1,300여 건을 처리해 전체 사건 처리율을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건국대 사건 등 주요 단체사건 90% 이상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권조사 중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진실규명 결정 사건

70~74차 전체위원회 진실규명 의결: 912건(975명)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4)
덕적도 어민 부부 인권침해 사건(故 김OO 등 2명)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3)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긴급조치 위반 불법구금 사건(방OO)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부산·울산·경남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서OO)

## 전남 신안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 - 지도읍을 중심으로 -
## 전남 신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4)(5)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대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OO)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OO)
외항선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노OO)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강OO)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4) - 협동호 등 1972. 5. 10. 동해 귀환 -
보안사 및 안기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박OO)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1)
경북 상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북 고령·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북 괴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남원 대강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문OO 등 2인)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인권침해 사건(임OO)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이OO)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5) - 성신호 등 1968. 3. 21. 귀환 -

##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 의신면·임회면을 중심으로 -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

## 3·15의거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故 전OO 등 7명)

# 임자면 304명, 지도읍 52명 적대세력에 희생

> 경찰·공무원·우익 인사와 가족, 기독교인, 부유하다는 이유로 수장시키거나 생매장
> 일가족 23명 집단살해 "신안의 비극"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 중인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4월 26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신청사건 외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희생자들도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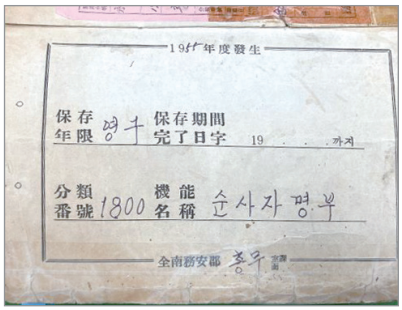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가족·20세 이하 많아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5)'은 3월 12일 열린 74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1950년 7~10월 임자면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 304명이 경찰·공무원·우익 인사와 가족, 기독교인,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결과 인민군이 목포를 점령한 7월 24일경부터 국군이 목포에 상륙한 10월 2일경까지 각 면마다 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임자면에선 지방좌익들이 경찰이나 우익인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수장시키거나 생매장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 진실규명 신청된 희생자 258명과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46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의 희생 사실과 신원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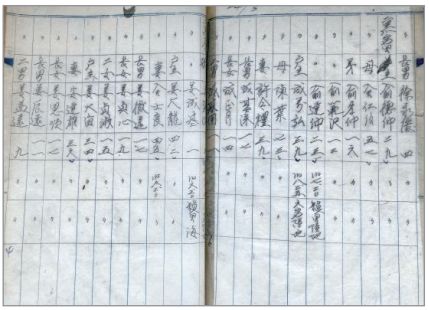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6일 72차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신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4) -지도읍을 중심으로-'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1950년 8~10월 신안군 지도읍 주민 52명이 경찰, 우익인사와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도읍 일대에서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적등본, 족보, 6·25사변피살자명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 관련 자료 조사와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진실규명 신청된 43명과 조사 과정에서 희생이 확인된 9명 등 52명의 신원과 희생 사실이 확인됐다. 희생 장소는 당촌리 묘동마을, 감정리 원감정마을, 봉리 황금마을, 태천리 태천마을, 광정리 원광정마을이다. 한국전쟁 당시 지도읍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지역 출신의 분주소원과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일가족 23명이 집단 살해되는 등 대부분이 가족 단위의 집단 희생이며, 20세 이하 희생자도 많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순사자명부 표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순사자명부에 실린 명단.



임자면 6·25참변 순사자 현황.

## 군경도 수복 과정서 민간인 46명 살해

인민군이 퇴각하고 수복되는 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1950년 10월 17일 해군 백부대가 신안군 지도읍(당시 지도면)을 수복하기 위해 읍내리 선창에 상륙했다. 군인들은 자동리, 태천리, 읍내리 선창 등에서 민간인들에게 총을 겨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6일 72차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신안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 지도읍을 중심으로-'**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주민 46명이 좌익 활동이나 부역혐의를 이유로 지도읍 일대에서 해군 백부대 군인, 무안·목포경찰서, 지도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조사와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 등을 벌인 결과 신청사건 42명과 희생이 확인된 4명 등 46명의 신원과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군경에 의해 민간인 희생 사건이 벌어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선창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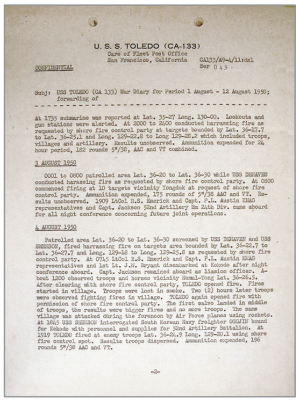
# 주민 33명 사망 확인, 4명 부상 민간인 희생 사실 확인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이나 포격, 총격 등으로 우리 국민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20일 73차 전체위원회에서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 영덕, 포항 등 7개 지역서 희생 확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신청사건 중 처음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희생 사건 26건에 대해 신청인·참고인 진술 조사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미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33명 사망, 4명 부상 등 37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U. S. S. TOLEDO (CA-133)

Office of Fleet Post Office
San Francisco, California

CONFIDENTIAL

Subj: USS TOLEDO (CA 133) War Diary for period 1 August - 12 August 1950; forwarding of

1 AUGUST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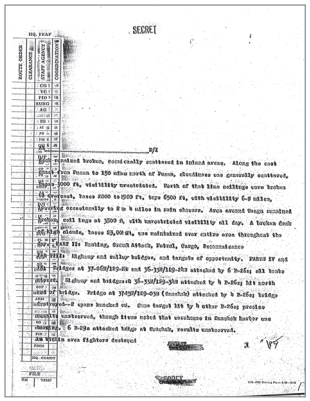
At 1735 submarine was reported at Lat. 35-27 Long. 130-00. Lookouts and gun stations were alerted. At 2000 to 2400 conducted harassing fire as requested by shore fire control party at targets bounded by Lat. 36-12.7 to Lat. 36-23.1 and Long. 129-48.8 to Long 129-28.2 which included troops, villages and artillery. Results unobserved. Ammunition expended for 24 hour period, 182 rounds 8"/55, AAC and VT combined.

2 AUGUST 1950

0001 to 0600 patrolled area Lat. 36-20 to Lat. 36-30 while USS BRAINE conducted harassing fire as requested by shore fire control party. At 0600 commenced firing at 10 targets vicinity Yongdok at request of shore fire control party. Ammunition expended, 175 rounds of 8"/55 AAC and VT. Results unobserved. LTJG[illegible] R.N. Emerick and Capt. F.L. Austin USAC representatives and Capt. Andrews 52nd Artillery Bn Adv Div. came aboard for all night conference concerning future joint operations.

4 AUGUST 1950

Patrolled area Lat. 36-20 to Lat. 36-30 screened by USS BRAINE and USS HENDERSON fired harassing fire on targets area bounded by Lat. 36-12.7 to Lat. 36-23.1 and Long. 129-48.8 to Long. 129-28.2 as requested by shore fire control party. At 1400 LTJG[illegible] R.N. Emerick and Capt. F.L. Austin USAC representatives and Lt. J.K. Bryant disembarked at Yongdok after night conference aboard. Capt. Jacobsen remained aboard as liaison officer. A[illegible] 1200 observed troops and horses vicinity Hamal-Dong Lat. 36-04.4, after clearing with shore fire control party, TOLEDO opened fire. Fires started in village. Troops were lost in smoke. Two (2) hours later troops were observed fighting fires in village. TOLEDO again opened fire with permission of shore fire control party. The first salvo landed in middle of troops, the results were bigger fires and no more troops. The next salvo landed in village, destroying it. Fires were visible for many miles. At 1845 USS BRAINE intercepted South Korean Navy freighter GOGAIP bound for Yongdok with personnel and supplies for 32nd Artillery Battalion. At 1848 TOLEDO fired at enemy troops Lat. 36-04.4 Long. 129-48.1 using shore fire control spot. Results troops dispersed. Ammunition expended, 196 rounds 8"/55 AAC and VT.



SECRET

SECRET

(왼쪽) 미 톨레도함 전쟁일지(1950. 8. 4.). 미군의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공격이 상세히 담겨 있다. @미 해군역사센터

(오른쪽) 미 극동공군 일일전투작전 요약본(1950. 7. 8.). 미군이 영덕군 송천교와 울진군 부구교를 이날 폭격했음을 확인해준 문서다. @미 공군역사연구소

미군 공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확인된 지역은 울진군 북면 부구리,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합가리, 김천시 부곡동, 영일군(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등 7개 시군이다.

경북지역 신청사건은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8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모두 일어났다. 인민군에 잡혀갈만한 젊은 청년들은 이미 마을을 떠났고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이 희생됐다.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로켓포를 쏘고, 기총사격을 가하는 등 폭격은 무차별적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는 가운데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생존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포함해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등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신청사건 40건에 대해 첫 조사 개시 후 모두 197건을 조사하고 있다.

# 보도연맹원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 살해

> 20~30대 평범한 농부들
> 예비검속 후 군경이 살해
>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 권고"

20~30대 평범한 농부들이 보도연맹원, 요시찰 대상자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구금됐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상권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20일 열린 73차 전체위원회에서 **'경북 상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50년 6~7월 주민 14명이 예비검속돼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부치대이와 낙동면 성골 등에서 경찰과 6사단 헌병대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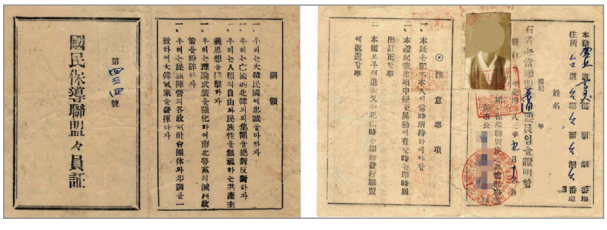
## 상주 14명, 고령·성주 15명 희생 확인

희생자들은 상주경찰서가 후퇴하기 직전인 1950년 6월 말부터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전인 7월 말경 낙동면 구잠리 부치대이 고개, 낙동면 성골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인·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좌익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연좌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원서 접수가 안 되거나 해외 취업 때 출국 허가가 나지 않아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족이 경찰에 불려가 고문당해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로 고통받는 사례도 있었다.

**'경북 고령·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73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다. 주민 15명이 보도연맹원,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1950년 7~8월 초 희생된 사건이다. 고령·성주경찰서 경찰과 국군 17연대, 육군 정보국 소속 CIC(방첩대)가 이들을 고령지역의 회천교 냇가 모래사장·금산재·가람 금굴, 성주지역의 초전면 용봉리 너리골·벽진면 매수리 수남마을 야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했다.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월 23일 71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합천군 가야면, 묘산면, 봉산면, 쌍책면, 율곡면, 합천읍 주민 8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합천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산청군 방아재 등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주체는 합천


國民保導聯盟々員証

국민보도연맹원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찰서와 지서 소속 경찰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으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침해"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6명은 2월 6일 72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고성군 고성읍, 회화면, 개천면, 동해면에 살던 보도연맹원, 요시찰대상자들이 1950년 7월 중순~8월 초 예비검속돼 희생된 사건이다. 가해주체는 고성경찰서와 지서 소속 경찰이다. 희생자들은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와 오방리 오방저수지 뒷산,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북 성주군 보도연맹 사건 유족이 집단희생지인 벽진면 매수리 수남마을 야산을 가리키고 있다.

상주 보도연맹 사건 육지봉 신청인

### "도장 빌려줬다가 보도연맹 가입 서럽게 살아온 한 풀리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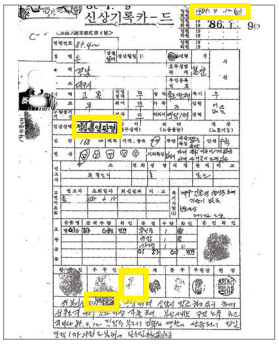
경북 상주군 화서면 봉촌리에 살았던 아버지(육동열, 1925년생)는 평범한 농부인데 1950년 7월 15일 화서지서로 모이라는 출석 통보를 받고 나갔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상주경찰서로 옮겨간 후 낙동면 금굴에서 집단 총살됐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아버지의 나이 스물다섯 살 때 일이지요. 친분 있는 사람에게 도장을 줬다가 보도연맹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서지서로 나가고 12일 후 피난지에서 남동생(육두봉)이 태어나 사건 발생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죽음 이후 증조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궁핍을 겪어 대학 입학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말도 못 할 만큼 서러운 그 세월을 내 나름대로 헤쳐나왔어요. 세월이 이만큼 흘렀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어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좋지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서럽게 살아온 그 한이 풀리지 않네요.

# 153명 확인 3차 진실규명…
# 피해자 자서전 발굴

권위주의 정권 때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3차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피해자 153명을 포함해 1~3차 진실규명 결과 모두 490명이 피해자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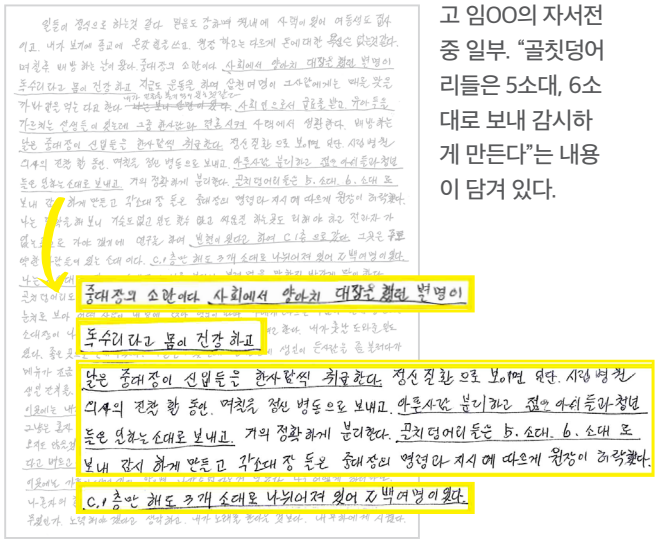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9일 열린 70차 전체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3)'**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1985년 4월 12일 입소한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신상기록카드. 임○○의 도장이 날인돼 있다.

## 손글씨로 빼곡히 남긴 형제복지원 참상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35년 만에 이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공식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와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다.




고 임OO의 자서전 중 일부. "골칫덩어리들은 5소대, 6소대로 보내 감시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사례 중에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본부 요원으로 발탁돼 신입 피수용자들의 신상기록카드 작성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故 임○○)가 포함됐다. 그는 형제복지원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집필했다. 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8월 20일경 쓰인 자서전은 조사결과와 맞아떨어질뿐 아니라 형제복지원 생활상이 상세히 기록돼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김광동 위원장은 "3차 진실규명 결정과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기관들이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와 사법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제 수용 후 초소 설치해 감시 “중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가 1월 9일 70차 전체위원회에서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등 11명이 명목상 윤락의 방지와 요보호 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첫 확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경찰과 보건소, 행정기관은 피해자 등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했으나 강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는 경찰과 보건소, 행정기관에서 여성수용시설 입소 대상자를 강제로 단속, 구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에 요보호여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성병검진 규정 등 단속 근거로 삼은 법 규정에서도 강제구금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철책이 설치된 시립여자기술원(옛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모습. 여성수용시설들은 원생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달고, 초소까지 설치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다. @SBS 방송 캡처

더욱이 대부분의 여성수용시설은 자의에 의한 중도 퇴소가 불가능했고, 원생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 기숙사 등지의 창문에 쇠창살을 달고, 일과시간 후에는 외부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초소까지 설치해 엄격하게 감시하는 등 외부와 소통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수용시설은 폭력, 상해, 구타, 가혹한 기합 등을 가하는가 하면 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의식주, 의료 처우 등 기본 생활을 지원하지 않은데다 실질적인 기술 훈련도 하지 않았던 것이 인정됐다.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보건사회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가 사건 피해자 등 11명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 이윤상 유괴살해범 몰려 고문 끝에 실명 “경찰청 사과와 명예회복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20일 73차 전체위원회에서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1981년 9월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유괴사건 용의자를 불법체포한 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 진범 1년 뒤 잡혀… 경찰청에 사과 권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은 1981년 9월 4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이윤상 군 유괴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여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던 중 같은 해 9월 8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법원은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인을 1981년 9월 4일경부터 같은 달 9일까지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형법’(제124조)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철야신문 등에 의한 강압적 수사에 따른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했다는 판결, 신청인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마포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경찰청)가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청인 이상출 씨

### “수사받다 고문으로 한쪽눈 잃어… 조사관 열심히 일해준 덕에 진실규명”



1981년 9월 4일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와 협조해 달라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채워 바로 경찰차에 태우더니 금강여관으로 끌고 갔어요.

철야신문 등 강압 수사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더니 계속 고문을 했어요. 주전자에 든 짬뽕 국물을 얼굴에 들이부어 코로 들어가게 하는 고문도 2~3회 받았어요.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고문까지 당하니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부득이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강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 진행 방향을 놓고 다투던 경찰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찔렀어요. 결국 실명하고 말았죠. 지금은 왼쪽 눈의 시력이 0.2로 점점 나빠져서 “곧 장님이 되겠구나” 하는 불안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애도 많이 타고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 열심히 일해준 덕에 지난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 ‘오적 필화 사건’ 사상계 편집인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6일 72차 전체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1970년 월간 『사상계』 편집인으로 근무하던 당시 시인 김지하(작고)가 지은 담시 ‘오적(五賊)’을 5월호에 게재해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 김지하 시 ‘오적’ 게재… 고문·가혹행위

법원은 김 씨가 ‘오적’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고, 내란까지 이르게 하는 등 북괴의 대남전술에 동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상계』에 게재한 후 배포, 북괴 활동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판결문, 수사·공판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970년 6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 씨를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후 사실상 구금 상태인데도 사후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형사소송법’상 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 씨와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불법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왼쪽) ‘오적’이 실린 사상계 1970년 5월호 표지.

(오른쪽) ‘오적’ 삽화. 고 김지하 시인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5명의 도둑으로 풍자해 ‘오적’을 썼다.

# 민간인 간첩 누명 씌워 전향 강요 “역용공작 드러났다”

1970년대 초반 재일 유학생 출신을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검거한 뒤 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역용공작’을 벌이다 공작이 끝나자 구속시킨 사건의 전모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23일 열린 71차 전체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서○○)’**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다.

## 불법구금·전향 강요 확인 “재심 권고”

서 씨는 일본 유학 중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1971년 5월 보안사에 검거된 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보안사 수사관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서 씨를 보안사 보광동 수사분실에 최소 19일간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후 전향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만들어 역용공작에 활용한 사실이 국군방첩사령부(전 보안사) 수사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역용공작이란 정보요원을 포섭해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는 공작을 가리킨다. 보안사는 역용공작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종료한 후 1971년 9월 서 씨를 구속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수사 과정상 위법 행위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가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 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진술 강요와 가혹행위 등을 당하고 처벌받아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특히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역용공작까지 강요해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서 씨에 대한 불법구금 정황이 있었는데도 수사지휘 기관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기소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 대표기관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도 서 씨가 공판에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는데도 임의성 없는 검찰 진술을 기초로 유죄를 선고해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기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심한 고문에 정신이상까지…
# “인권은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첫 직권조사 사건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 - 대양호 등 1969. 5. 28. 귀환 -’을 시작으로 2월 전체위원회에서 5차까지 진실규명된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모두 412명이다.

## 4, 5차 진실규명 “국가 사과·재심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6일 72차 전체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4) - 협동호 등 1972. 5. 10. 동해 귀환 -’**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협동호, 창동호 선원 17명이 1971년 5월경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한 선원은 심한 구타에 죽으려고 자해를 했다가 뇌수술까지 받았고, 또 다른 선원은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당하는 심한 고문 끝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군 수사정보기관인 보안대까지 나서 “경찰의 심한 고문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한 문서가 확인됐을 정도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20일 73차 전체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5) - 성신호 등 1968. 3. 21. 귀환 -’**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67년 11월 11일 납북된 성신호 등 8척의 선박에 탔던 선원 51명이 귀환 직후 형사 처벌받은 사건이다. 조사결과 납북귀환어부들은 간첩 지령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불법구금과 허위자백 강요, 가혹행위뿐 아니라 형사처벌 이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사찰, 감시, 연좌제 등을 통한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데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금성호 선원 서정두 신청인

### “검찰서 구타당해 핏덩이 쏟아…
### 취업 제한에 타지로 이사 다녀”

명태잡이배인 금성호를 타고 처음 바다에 나간 날이 바로 1966년 11월 11일입니다. 내 나이 열일곱 살 때였어요. 이듬해 3월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후 속초검사실에 불려가 조사받으면서 각목으로 맞았어요. 허리에서 핏덩이가 후두둑 떨어져 나오더군요.

집행유예 2년간 감옥이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선원들과도 못 만났어요. 그 뒤 상선 취업도 신원조회로 못 나갔어요. 부산, 용인으로 이사하고, 취업하는 곳까지 정보과 경찰이 찾아왔어요. 조카들 중 현역 입대자가 한 명도 없자 나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말까지 들었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좋았지만 제 나이 팔십 가까이 되니 50년 넘은 한이야 풀리겠습니까.

# 내무부 치안국 불법구금·고문 확인 "국가의 사과·재심 권고"

1956년 덕적도에서 간첩으로 몰려 10년 감옥살이 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어부의 억울한 삶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9일 열린 70차 전체위원회에서 **'덕적도 어민 부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김○○ 등 2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김 씨 아들 역시 1989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어 2대가 간첩 조작 피해를 겪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 간첩 몰린 남편, 만기 출소 후 끝내 극단적 선택

덕적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김 씨는 처남에게 속아 북한을 방문했다가 아내와 함께 내무부 치안국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다. 그는 군사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교양을 받은 후 각종 지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품을 수수해 귀환한 뒤 군사 기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체포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내무부 치안국은 피해자 부부를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이들에게 고문·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무부는 정부 수립 후 발족한 중앙행정기관으로, 1994년 총무처와 통합해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또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내무부 치안국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내무부 치안국은 긴급구속장만을 작성하고 피해자 부부를 구속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약 한 달간 이들을 불법구금했다. 내무부 치안국, 인천수상경찰서 등 수사기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내무부 치안국은 1·4 후퇴 때 월남한 피해자 부부가 양민으로 위장해 월남했다며 새우젓을 팔려고 지역을 돌아다닌 남편의 생계 활동조차 간첩 행위로 단정했다.

특히 남편 김 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한글 이름도 틀리게 쓴 무학력자인데 이례적으로 1심 판결 당일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인 상소권포기신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씨는 만기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구금,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직권조사 결정

한국전쟁 당시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에 대한 직권조사가 결정됐다. 직권조사 대상은 642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6일 72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의 일환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 장진호전투, 원산상륙작전 등 642명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은 1950년 9~10월 642명이 일본에서 출정해 미군과 국군 부대에 배속돼 인천상륙작전을 포함해 원산상륙작전, 장진호전투, 현리전투, 백마고지전투 등에 참전했다. 이 중 52명이 전사했고, 83명은 전투 도중 행방불명됐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참전기념비. @인천 미추홀구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재일동포 청년과 학생들이 병역 의무는 물론 조국의 부름이 없었지만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조국을 구하기 위해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전적을 재조명해 주권 수호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일학도의용군 모집 과정, 배속부대, 참전 전투, 공훈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규명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의 애국심과 주권 수호 의지를 재조명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현재 직권조사 중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전남 신안 민간인 희생 사건'(2개 사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 사건' '3·15의거 관련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 '영화 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등 7건이다.

한편 71차 전체위원회에서 '동영알루미늄 노조 활동 인권침해 사건(나OO)', 72차 전체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장OO)' '금성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8. 3. 21. 귀환)'에 대해 각각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진실을 밝히고 기억합니다”

##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도장마을 사건

> “
> 스물 대여섯 아낙이
> 아이를 업은 채로
> 군인의 총부리를 부여잡았다
>
> *“죄 없는 마을사람 왜 다 죽이냐!”*
>
> 기적같이 학살이 멈추었다
> 하지만 10살 아이를 포함해
> 이미 20명이
> 목숨을 잃은 후였다
> ”

글 | 사진 **강변구 작가**·<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 저자




추모탑 앞에 선 도장리 주민들. 왼쪽이 증언자 김범순 옹, 가운데가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도암면유족회’ 형창섭 회장이다.




도장마을 앞으로 하천이 흐른다. 마을 뒤 해망산의 이름을 딴 해망산교.

새봄에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도장마을(道莊里)을 찾았다. 입구의 표석에 새겨진 글을 살펴보니 마을 이름에는 “해망산의 씩씩한 기운을 받아 후손들이 항상 도(道)와 의(義)를 숭상하고 마을이 계속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마을은 뒤편으로 삼면이 해망산, 고당산, 문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하천이 가로 흐르는 배산임수 골짜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았다.

## 이른 새벽 도장리 마을 포위한 국군
## “죽기 싫으면 다 나와라!”

해망산교를 건너면 바로 왼쪽에 2층 건물이 보이는데 도장리 마을회관이다. 출입문 위에 ‘도장리 밭노래’ 전승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1층에는 마을의 기록물과 유물들을 전시해 두었고, 2층에는 마을도서관이 있다. 회관 앞마당에 거대한 바둑돌처럼 놓인 것은 고인돌인데, 개발로 없어질 뻔한 것을 옮겨왔다고 한다. 길 건너편에는 마을의 옛 인물을 기리는 비석들이 나란히 서 있다. 오랫동안 잘 가꾸어온 삶터라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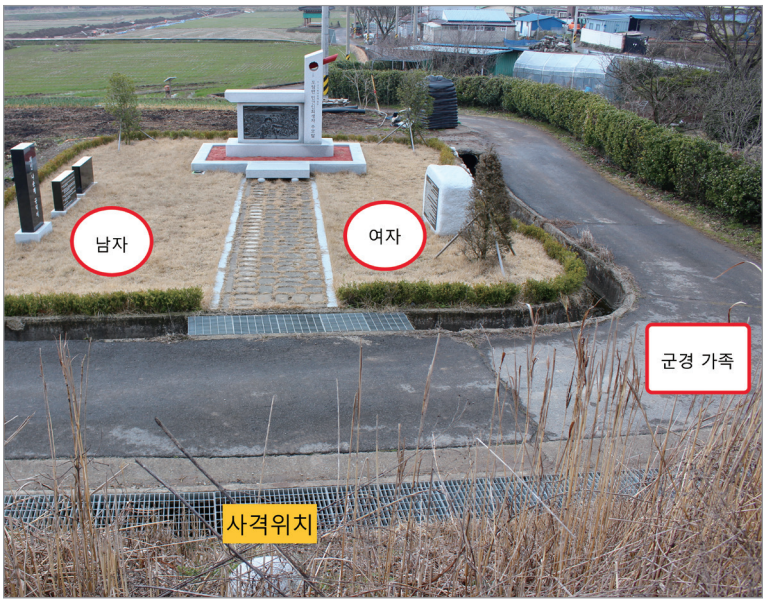
1951년 3월까지도 화순군 도암면은 수복 전이었다. 도암면 서쪽의 나주 다도면과 남쪽의 화학산을 포함한 장흥 유치지구에 남해여단을 비롯한 강력한 빨치산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화순에 주둔했던 국군 11사단이 본격적인 토벌 작전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도장리에서 빨치산들이 회의를 했다는 정보가 군으로 넘어갔다.

“전날 밤에 인자 반란군들 대장들이나 뭐어니 와가꼬 싹 회의를 했거든. 큰 집이서. 집도 크고 일반 집인디 마당도 넓고 커요. 우리 집만이로 마당도 넓고 컸어. 그래갖고 그냥 공산당들 노래 부르고…. 근디 공산당들이 내려와 가꼬 저런 회의하는 것을 군인들이 알어 부렀어. 글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 마을은 공산당이다, 지정을 받았던 모양이여.”(주민 형재환, 출처=디지털화순문화대전)

1951년 3월 17일 이른 새벽 이미 도장리는 군에 포위돼 있었다. 전날 마을 인근의 빨치산은 이미 국군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 준 후 밤을 틈타 빠져나간 상태였다.

국군 부대가 해망산을 거쳐 삿갓봉으로 내려왔다. 마을에다 포를 먼저 쏘고 나서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와 골목을 헤집으며 집에 숨어 있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저기 총을 쏘아대는 통에 마을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김범순 옹(86세)은 그때 10대 소년이었다. 그는 학살 현장으로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현재 유일하게 남은 사건 목격자이다.

"도포배미라는 논이여. 군인들이 집집마다 들어와서 그리 모이라는 것이여. 그러더니 남녀를 딱 구분해서 앉히더라고. 남자는 쩌 우측으로, 여자는 마을 쪽으로 해서 딱 앉혔어. 구분해서. 지휘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 좌중에서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은 이 노상으로 나오시죠.' 저 마을 산으로 초군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거든. 쪼그만한 길이. 그리 나오라 해서. 나도 경찰 가족이기 때문에. 그때 여수 반란 사건에 친형님이 광주경찰서에 계시다가 순직을 했어. 증원 나가 가꼬. 그래서 경찰 가족 나오라 항게 나도 앞으로 나갔제."



사건 현장인 도포배미 논. 2023년 3월 1일 '도암면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과 '의인 나순례 공덕비'가 건립됐다.

## 애기 업은 아낙이 총구 막아섰다
## 주민들 생명 살린 나순례의 용기

소대장쯤으로 보이는 지휘관이 산에서 군인들을 불러 내렸다. 군인들은 논 위쪽 언덕으로 이어지는 비탈에 경기관총을 거치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인 곳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총소리가 나자 옆으로 비켜 서 있던 여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난리가 났고 앞에서는 총을 맞은 사람이 쓰러졌다. 그때 스물 대여섯쯤 된 아낙이 세 살 먹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앞으로 뛰어나갔다. 죽을 힘을 다해 언덕을 올라가 군인의 총부리를 부여잡았다. "죄 없는 우리 마을사람 왜 다 죽이냐!" 예부터 전해오는 민요를 많이 알고 소리를 잘했던 나순례였다.

"그 양반이 당돌하게 나가서 말한 거여. 아무 죄 없는 주민들만 모였는디 이렇게 사람을 죽여부면은…. 막 난사를 시켜부니까.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총성을 멈춘 것이여."

기적같이 학살이 멈추었다. 하지만 이미 10살 먹은 어린이를 비롯한 20명이 목숨을 잃은 후였다. 나순례가 아니었다면 나머지 주민들의 생명이 어찌 되었을지 아무도 몰랐다. 군인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도곡면 쌍옥리로 소개시켰다. 간단한 식량과 이불만 챙기고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 위에 거적대기만 겨우 덮어놓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시신을 대발쌈(대나무로 이엄을 엮은 관) 해서 땅에 묻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암면 일대는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좌우간의 대립이 극심하였다. 도장리를 비롯해 면 전역에서 군인이나 경찰 혹은 지방좌익들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오랫동안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다 1994년 도장리 마을총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8년에 도장리 사건, 사평면 다산리

사건이 당시 한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1998년 8월 1일 화순군의회가 '화순군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의회가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도장리 주민들은 1999년 8월 24일 국방부에 국군 11사단 20연대의 학살 당시 작전 기록 사본을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 진실규명 결정 후 명예회복 기억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행자부와 국방부로부터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 노력을 집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근리 사건 해결 후 사안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는 무성의한 회신만 받았다.






(왼쪽) 기관총을 세웠던 자리 표식.

(오른쪽) 의인 나순례 공덕비. 전남 나주 출신인 고(故) 나순례는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51호 마을민요(도장리 밭노래)를 전승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2004년에는 도장리 마을총회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과 나순례 여사 공적비 건립이 결의됐지만 비용 문제로 여의치 않았다. 2009년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후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통비분자나 좌익으로 매도당해온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비로소 이뤄졌다.

2011년 3월 14일 도장리 마을회관 앞에서 민간인학살 희생자를 위한 첫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합동위령제추진위원회는 학살이 있은 지 60년 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도장리뿐만 아니라 도암면 일원에서 군경이나 좌익에 의해 학살된 주민들의 넋도 달래야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이제는 당시 그 참혹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밝히고 역사의 한 장에 분명하게 기록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시 처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을 통해 새삼스럽게 전쟁의 참상을 되새겨보고 평화의 소중함과 인권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주민 형선근, 출처=디지털화순문화대전)

위령제를 지내고 나서 참석자 모두가 학살 현장으로 향했다. 60년 전 불타는 마을을 뒤로 하고 주민들이 빠져나오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었고, 시간을 거슬러 점점 뚜렷한 기억으로 다가가는 일이었다. 주민들은 비통한 기억의 터에 해마다 빠짐없이 모를 심고 쌀을 수확해 생명의 땅으로 삼았다. 위령제 참석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묵념과 헌화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른 봄의 논은 그날과 마찬가지로 말없이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조선의 억센 젊은이"

# 독립 꿈꾼 8인의 비밀결사대

##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최종길** 조사1과 팀장



"민족의식 고취" "조선어 연구"
청년들의 기상, 항일로 하나 되다
진실화해위원회 발굴로
80년 만에 빛 봤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130건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가운데 진실규명 결정이 난 후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운동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사례는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1명), 윤상형의 항일의병운동(1명),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5명)이다. 이중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굴해 8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해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상통제 정책을 더욱 강고하게 실시했다. 일본은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해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인물에 대한 거주 제한과 교화를 시작으로 1938년 7월 항일운동 전력자 중 친일로 전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외곽단체인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결성했다. 1940년 사상 정화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국연맹을 해체한 뒤 지역 보호관찰소를 대화숙(大和塾) 체제로 통합했다. 이때부터 각 지역 보호관찰소 관할 대상자들은 모두 대화숙에 가입해 이념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지하에서는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 예산농업학교 주축 된 비밀결사대
### 1939년 6월 교회 조직으로 출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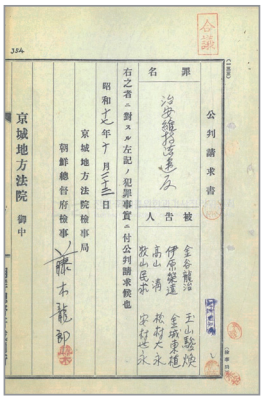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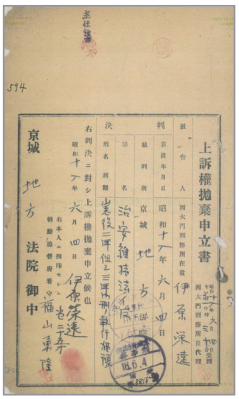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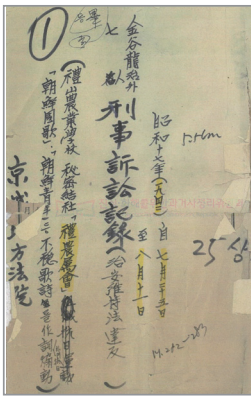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항일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예농속회(禮農屬會)다. 예농은 예산농업학교를 지칭하며, 속회란 감리교회에서 구역을 나눠 모이는 기도회를 가리키는 용어다. 예농속회란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던 감리교 예산교회 전도사 김희운이 교회 신자들 가운데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만든 교회 조직이다.

1938년 3월 경성부에 있는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한 김희운은 1939년 5월 초순경 예산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교회 신자는 남녀 합쳐 약 60명 정도였는데, 이중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이 10명가량 있었다. 김희운은 1939년 6월 초순 예산교회 전도실에서 예산농업학교 학생 윤영원, 최경용, 이민구와 함께 모여 예농속회를 조직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운은 "단결을 굳게 하고, 민족의식을 향상하여 동포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체로 예농속회를 조직"하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예농속회를 결성한 목적은 "민족혼을 연성(練成)하고, 일본의 국체 관념을 말소하여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이들은 수요일과 일요일에 모임을 가졌으며, 속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달 50전씩 징수했다. 조선 독립을 위해 정한 예농속회 강령은 아래와 같다.

1.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동포를 사랑할 것
1. 조선어를 연구하고 사용할 것
1. 단결을 굳게 하고, 조선민족의 정신을 잊지 않을 것
1.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많이 모을 것
1.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민족의 의식을 앙양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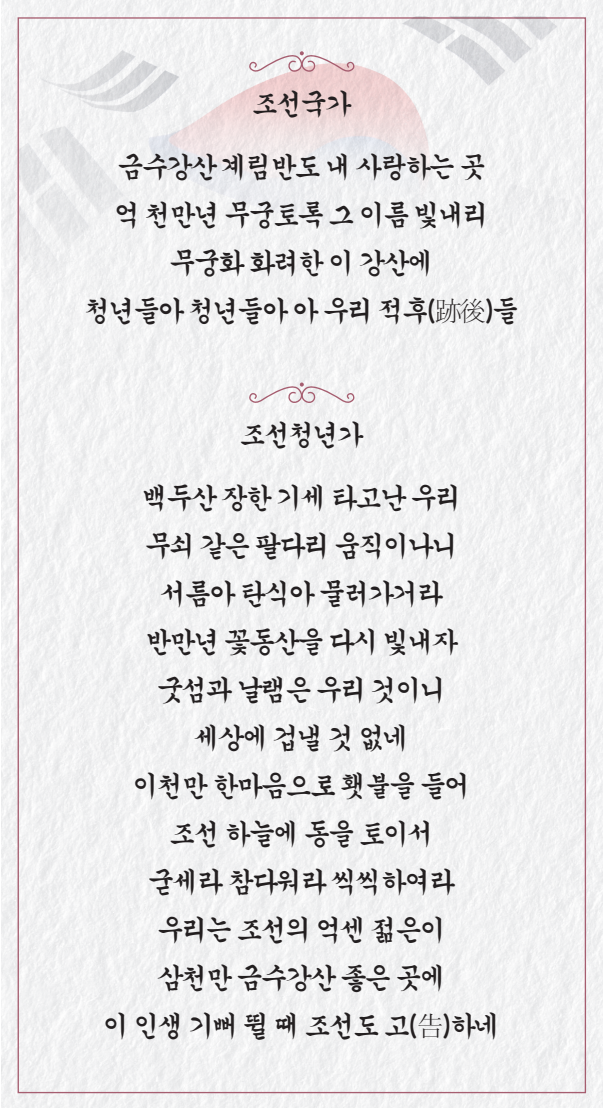
예농속회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차적인 업무는 동지 규합이었다. 모임에서 가장 적극 활동한 윤영원은 1939년 6월 중순 "동지를 모으는 방법으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로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서로가 만든 동지라도 이를 비밀에 부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 조직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에 중점을 둔 것이다.

(왼쪽부터) 예농속회 공판청구서. 예농속회 상소포기서. 예농속회 형사소송기록 표지.

윤영원은 1939년 6월 말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예산농업학교 동기생이자 예산교회를 다니는 최경용·이민구와도 친한 장준환의 하숙집에서 "세계 각국 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 조선민족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그룹을 조직하고 동지를 획득하고 있는데 그대도 가입하라"고 권유해 장준환을 동지로 가입시켰다.

윤영원을 통해 예농속회에 가입한 장준환은 1939년 8월 중순 오후 8시경 예산교회 앞의 제방도로 위에서 예산농업학교 동기생 김동식에게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함께 운동할 동지를 모으고 있는데 같이 가입"할 것을 제안해 김동식을 동지로 가입시켰다.



조선국가

금수강산 삼림반도 내 사랑하는 곳
억 천만년 무궁토록 그 이름 빛내리
무궁화 화려한 이 강산에
청년들아 청년들아 아 우리 적후(跡後)들

조선청년가

백두산 장한 기세 타고난 우리
무쇠 같은 팔다리 움직이나니
서름아 탄식아 물러가거라
반만년 꽃동산을 다시 빛내자
굿섬과 날램은 우리 것이니
세상에 겁낼 것 없네
이천만 한마음으로 횃불을 들어
조선 하늘에 동을 토이서
굳세라 참다워라 씩씩하여라
우리는 조선의 억센 젊은이
삼천만 금수강산 좋은 곳에
이 인생 기뻐 뛸 때 조선도 고(告)하네

윤영원이 조선의 독립사상을 선전할 목적으로 박대영에게 전달한 '조선국가'와 '조선청년가'에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지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염원이 배어 있다.

윤영원은 박대영에게 노래를 전달하면서 "일본은 장기간의 전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으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므로 이제부터 조선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있으니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윤영원은 장준환·박대영·안세영을, 장준환은 김동식을 예농속회 회원으로 입회시켰다. 그 결과 예농속회의 최종 구성원은 김희운, 윤영원, 최경용, 이민구, 장준환, 박대영, 안세영, 김동식 등 8명이었다.

## 충청·경기 포괄, 삶터 중심 독립운동
## 8명 재판 회부, 유죄 판결

그러나 예농속회를 조직하고 약 1년 후인 1940년 4월 초 지도자인 김희운이 서울로 전근을 가고, 예농속회의 실질적인 임무를 담당한 윤영원 역시 졸업 준비로 바빠지면서 속회 활동은 점차 소극적으로 변했다. 즉, 예농속회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1939년 6월의 결성부터 1940년 4월이나 5월경까지 약 1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경찰보고서에 표기된 예농속회 조직도에는 당시 예농속회 회원들의 거주 지역이 표기돼 있는데 충청도와 경기도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회원들의 결속력과 전쟁으로 인한 감시와 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실천한 상황을 나타낸다.

조직 결성과 동지 규합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던 예농속회 회원들 가운데 윤영원이 1942년 7월 수원경찰서에 체포되면서 경찰의 검거가 시작됐다.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8명이 재판에 회부돼 1943년 6월 4일 오전 10시 경성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예농속회 회원들의 항일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해 2022년 8월 15일 윤영원·장준환·김희운·안세영에게, 2022년 11월 17일 이민구에게 각각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 3·15의거 진상규명 2년

# 밝혀진 사실, 밝혀야 할 진실

**글** | 임종금 3·15의거과 팀장
**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15의거 발포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손석래 마산경찰서장.

1960년 3월 15일 밤 경남 마산시. 온 시내가 "내표 내놔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외침에 휩싸였다. 경찰과 반공청년단은 총 개머리판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시위대에 맞섰다. 시민의 머리가 터지고 손과 팔과 허리가 부러져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은 끝없이 밀려들었다. 급기야 경찰은 시민들을 조준해 사격하기 시작했다.

###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자 참혹한 인권유린 현장

마산시청, 남성동파출소, 북마산파출소, 시민극장, 무학국민학교 등 마산 시내는 총소리로 덮였다. 7명이 즉사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총탄에 맞았다. 김주열 시신이 떠오른 1960년 4월 11일에도 학생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한 1960년 4월 13일에도 총성은 그치지 않았다.

> 시위대 총격·고문 가한 경찰 무죄·가석방
> 발포 지휘체계, 고문 책임 소재,
>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규명이 남은 과제

총격 후 추격이 시작됐다. 경찰과 반공청년단은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폭행한 다음 트럭에 실어 마산경찰서, 파출소, 마산시청, 창고, 기차 화물칸으로 보냈다. 그곳에서도 폭행은 이어졌고, 온갖 고문이 뒤따랐다.

3·15의거는 으레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지만, 뒤집어 말하면 '참혹한 인권유린 현장'이었다.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다. 마산 시민들은 엄청난 인권유린을 저지른 이들이 단죄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김주열 시신을 유기한 박○○ 경위. 그는 일제강점기 '아라이 헌병보'로 경남지역에서 이름을 날린 악질 고문 헌병보였다. 그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체포됐으나 반민특위가 경찰 습격으로 유명무실해지자 풀려난 후 곧이어 경찰이 돼 시민에게 총을 쏘고 김주열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그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7년으로 감형됐다.

박○○와 함께 시민들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김○○·이○○ 경사는 징역 15년, 주○○·이○○ 순경은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1963년 모두 가석방됐다. 마산 시민을 고문하고, 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장○○ 경사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1963년 5·16 특사로 사면됐다.

마산 시민들은 수많은 사람을 무참히 폭행하고 고문한 이들에게도 공분을 느끼고 있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고문 경찰 8명을 특정해 지명수배했지만, 경찰은 옛 동료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황○○ 순경은 지명수배에도 마산 시내를 활보하다 고문 피해자인 박○○이 그를 발견했고, 박○○이 직접 그를 제압해 검찰에 넘겨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을 지휘하던 손석래 마산경찰서장, 서득룡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 역시 지명수배에도 체포되지 않았다. 손석래 마산경찰서장은 8년 후인 1968년 8월 27일 자수했다가 그해 12월 병보석으로 석방된 후 1979년 5월 22일 발포 지시 혐의가 근거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득룡 지청장은 3·15의거가 무려 11년 지난 1971년 5월 27일 자수했으나 그해 8월 30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파기환송심 끝에 1979년 12월 27일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사건 발생 근 20년 만에 3·15의거는 무수한 피해자만 남은 사건이 되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경찰 말단인 순경, 경사, 경위 등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과 가족을 고통에 빠뜨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을 기다리고 있다.

## 지역사회에 일어난 변화의 물결
## 시위 참여 학교들, 기념비 설치

2022년 1월 21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사무실을 열고 진실규명 업무를 시작했다. 이곳은 과거 오동



마산 시민들에게 발포한 경찰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혁명검찰부의 구형을 기다리는 마산 발포 경찰들.

동파출소 건물로 3·15의거 당시 수많은 시민이 끌려와 고문과 폭행을 당한 역사적 장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도 만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우선 당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마산 시내 고등학교에 3·15의거 기념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 결과 다수 학생들이 참여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경남도교육청 지원으로 창신고등학교와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에 기념비가 들어섰고, 2024~2025년 사이 시위 참여자가 다수 확인된 5개 학교에도 교정에 기념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직권조사결과 1960년 4월 24~25일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할아버지·할머니 시위의 역사적 실체와 의미를 확인했고, 4월 26일 부산시위대 마산원정 시위에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달리 시위 도중 사망한 희생자 2명을 추가로 밝혀내 3·15의거 희생자는 모두 16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따라 3·15의거기념관, 3·15의거발원지기념관 등에 위원회 조사결과를 전시물에 적극 반영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3·15의거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가 지역사회에 더 넓게, 더 깊게 뿌리내릴 전망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339명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접수 기간이 10개월 남짓에 불과해 미접수 사례가 잇따르자 '3·15의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15의거 진상규명 추가 신청을 2023년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접수했다. 접수결과 153명이 추가로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이로써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자는 모두 492명에 이른다. 추가 접수자 153명 가운데 학생이 14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인권침해 사건도 16명에 달해 추가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을 고통에 빠뜨린 발포 책임 등 발포 지휘체계, 고문의 책임 소재,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등 3·15의거 당시 공권력 대응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 간첩 조작 사건, 적대세력 희생 사건
# 폭력의 흉터를 화해의 무늬로
# 숨겨진 진실을 밝혔습니다

## 70차 전체위원회 | 2024년 1월 9일

| | |
|---|---|
|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 **사건개요**<br>1949년 3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영암군 주민 21명이 영암군 학산면, 서호면, 미암면, 삼호면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좌익 활동, 부역 혐의를 이유로 영암경찰서, 각 면 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함<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함 |
|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 **사건개요**<br>1949년 2월부터 1951년 4월까지 해남군 주민 14명이 해남군 화산면, 마산면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기록조사와 진술조사결과 1949년 2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주민 14명이 좌익활동과 부역 혐의를 이유로 해남경찰서, 각 면 지서 소속 경찰, 의용경찰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함<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함 |
|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4) | **사건개요**<br>1950년 9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고창군 주민 23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주민 23명이 1950년 9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고창군 무장면, 흥덕면, 부안면, 아산면, 고창읍, 성송면 등에서 공직자나 그들의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됨<br>**권고사항**<br>국가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해야 함 |

| | |
|---|---|
| 긴급조치 위반 불법구금 사건(방○○) | **사건개요**<br>신청인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연행돼 최소 57일간 구금돼 조사받은 후 재판 없이 43일간 수감되다 구속돼 군 검찰로부터 1974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발령·유지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격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함<br>**권고사항**<br>국가는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 발동, 강압적 수사 방식, 기소·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장기간의 수감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함. 피해회복을 위해 구제 절차 등 화해 조치를 할 것을 권고 |

## 71차 전체위원회 | 2024년 1월 23일

| | |
|---|---|
|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 **사건개요**<br>1950년 10월부터 1951년 4월까지 담양군 주민 16명이 좌익 또는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행형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국군과 경찰이 담양지역에서 수복작전과 부역자 색출 활동을 벌이면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16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남. 희생자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고루 분포돼 있었음. 대다수(75%, 12명)가 남성이었음. 수복 작전과 부역자 색출 활동 중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임<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등을 해야 함 |
|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 **사건개요**<br>합천군 주민 8명이 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합천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신청인·참고인 진술, 제적등본, 족보, 학적부, 경찰기록,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 후 구금됐다가 산청군 방아재 등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드러남. 대부분은 20~30대의 남성이며,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임.<br>가해주체는 합천 경찰 등으로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함 |

| | |
|---|---|
| 부산·울산·경남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 **사건개요**<br>1949년 3월부터 1951년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주민 19명이 지방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제적등본, 족보, 6·25사변피살자명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들은 공무원, 우익인사, 종교인 또는 가족이거나 적대세력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됨<br>**권고사항**<br>국가는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함.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을 권고 |

## 72차 전체위원회 | 2024년 2월 6일

| | |
|---|---|
|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 **사건개요**<br>한국전쟁 발발 직후 고성군 고성읍, 회화면, 개천면, 동해면 등 4개 읍면 주민 6명이 보도연맹원, 요시찰 대상자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고성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희생자들은 1950년 7월 중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된 후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와 오방리 오방저수지 뒷산,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 등에서 집단살해됨. 20~40대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음.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다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또는 활동 경력을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함 |
| 대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 **사건개요**<br>1950년 8~9월 인민군 점령과 후퇴 시기에 주민 12명이 대전형무소 등에서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희생자들은 모두 20~60대 남성으로 우익 활동, 우익인사, 지주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금됐다가 대전형무소, 도마리 뒷산 등에서 집단살해된 것으로 드러남<br>**권고사항**<br>국가는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해야 함.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 **사건개요**<br>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 경찰 등에 의해 고창군 주민 20명이 심원·해리면, 공음면, 상하면에서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주민들이 심원면 만돌리 해변, 공음면 선산마을, 중예마을, 상하면 택동마을 등에서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됨<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함 |

| | |
|---|---|
|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 | **사건개요**<br>1964년 한일협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신청인이 반국가단체에 가입, 활동했다는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에 검거돼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됨. 또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고, 참고인들 역시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br>**권고사항**<br>국가는 불법수사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 **외항선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故 노○○)** | **사건개요**<br>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외항선원으로 일하던 신청인이 1975~1978년경 일본에 살던 조총련계 친인척들을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980년 3월 중앙정보부에 임의동행되고 같은 해 12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21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고, 구속영장도 긴급구속이 아닌 통상의 사전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 절차상 위법이 확인됨.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강요함. 아내 역시 진술 강요 등을 당한 것으로 판단됨<br>**권고사항**<br>국가는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강○○)** | **사건개요**<br>1968년 4월경부터 1976년 7월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신청인이 일본 체류 기간 중 조총련계 친인척을 접촉하고 북한 우월성에 대한 선전, 언동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신청인의 10촌 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국군방첩사령부 기록, 재심 공판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7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사실과 제주보안부대의 폭행과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이 확인됨<br>**권고사항**<br>국가는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해야 함 |
| **보안사 및 안기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박○○)** | **사건개요**<br>태백지역 노동운동가인 신청인이 1986년 보안사, 1992년경 안기부로부터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불법 수사를 받은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국군방첩사령부, 국정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태백산 공작'을 벌이던 보안사가 허위 제보를 받고 영장 없이 신청인을 연행한 후 장기간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군 보안대(301보안부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남. 신청인은 1992년 안기부에도 연행돼 불법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br>**권고사항**<br>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회복을 해줘야 함 |

## 73차 전체위원회 | 2024년 2월 20일

| | |
|---|---|
| 충북 괴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 **사건개요**<br>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 경찰 등에 의해 괴산군 주민 44명이 감물면, 청안면, 청원군 북이면에서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희생자들은 감물면 오성리 공동묘지, 청안면 조천리 솔티재,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옥녀봉 등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됨<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식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해야 함 |
| 전북 남원 대강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 **사건개요**<br>1950년 11월 남원시 대강면 강석리에서 국군 11사단에 의해 주민 25명이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조자로 의심받아 참수되거나 집단으로 총살된 것이 확인됨. 희생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었음<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해야 함 |
|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문○○ 등 2인) | **사건개요**<br>부자 관계인 두 사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소속 반국가단체 공작원과 회합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판결문, 구속영장, 수용기록, 사건 담당 검사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안기부에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최소 10일 이상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함. 또 수사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검찰 수사 중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확인함<br>**권고사항**<br>국가는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해야 함 |
|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인권침해 사건 (임○○) | **사건개요**<br>1974년 3월경 전북도경 정보과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대공분실에 약 5일 동안 불법구금돼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죄) 혐의를 수사받은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전북도경,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소속 수사관들이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진실규명대상자를 불법체포·구금하고 수사했음이 확인됨<br>**권고사항**<br>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해야 함 |

| | |
|---|---|
| 육군보안 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故 이○○) | **사건개요**<br>1976년 1월경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10여 일간 불법감금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보안사가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를 영장 없이 연행하고 10여 일간 불법감금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됨<br>**권고사항**<br>국가는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회복 조치를 해야 함 |

## 74차 전체위원회 | 2024년 3월 12일

| | |
|---|---|
|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 의신면·임회면을 중심으로 | **사건개요**<br>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전남 진도군 의신면과 임회면 주민 35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민간인 35명이 부역혐의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함. 가해주체는 진도경찰서, 의신지서, 금갑출장소, 고군지서, 임회지서 소속 경찰. 희생자들은 남성이 대다수이고, 직업으로는 농업 비율이 높았음<br>**권고사항**<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과하고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함 |
|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 | **사건개요**<br>1950년 9~10월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의신면, 조도면 주민 74명이 고군면 벽파항 등에서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민간인 74명이 1950년 9~10월 경찰 가족, 공무원, 교사, 마을 이장과 가족, 우익 인사와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함<br>**권고사항**<br>국가는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함.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 |
| 3·15의거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 (故 전의규 등 7명) | **사건개요**<br>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 통치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임. 경찰 등 공권력의 무차별 총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 참여자에 대한 폭행과 구금, 고문 등으로 다수의 상해 피해자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br>**진실규명 결정 이유**<br>故 전의규 등 7명은 3·15의거 시위 참여 과정에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었고, 마산경찰서 등에 불법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됨. 진술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시위 일자, 장소와 상해·구금 등 인권침해 사실이 문헌 자료, 언론 기사와 부합한 점 등을 통해 시위 참여와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됨<br>**권고사항**<br>국가(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창원시)는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회복 조치를 해야 함. 경남교육청과 함께 3·15의거 정신을 후세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 |

##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소관기관 재지정 통보

# 화해·통합 위해 권고 이행은 필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2조제4항, 제34조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과 관련해 국가에 대한 권고 내용을 진실규명 결정서에 담고 있다.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입법에 관한 정책권고 1건을 의결하고, 진실규명 결정 사건 202건에 대해 권고했다. 진실규명 결정 사건 중 2023년 상반기까지 의결된 102건은 세부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종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나오는 종합보고서에 실리는 '종합권고'는 정부가 이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규명되는 사건의 '개별권고'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 권고를 국가기관이 제때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결국 지난해 3월 21일 '과거사정리법'이 일부 개정돼 위원회 활동 기간 내 의결되는 개별사건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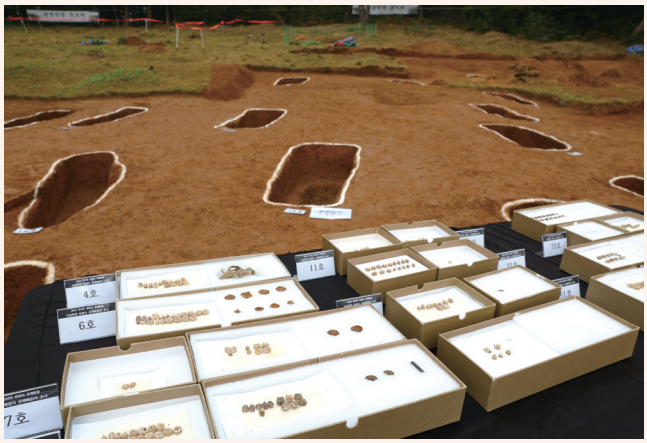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시행을 앞두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종전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소관기관 지정과 통보 현황을 점검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 전 권고사항 소관기관 지정·통보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까지 수록된 102건의 진실규명 결정 중 25건에 대한 권고사항 소관기관을 2023년 3월 6일, 5월 4일, 5월 17일 세 차례 재지정·통보했다. 나머지 79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과의 협의를 통해 1월 8~9일 권고사항 소관기관을 재지정해 통보했다.

###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위로금·생활 지원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비를 각각 지원한다. 부산시는 1월 29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 ☎ 051-888-6467

## 경기도, 올해 선감학원 유해발굴 본격 추진




경기도가 3월부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에 나섰다. 경기도는 유해발굴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이달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사진>**.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를 포함해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의: 경기도 인권담당관 ☎ 031-8008-2538 |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 031-242-1636

## 서울 강북구, 민간인 희생자 유해 15구 발굴

서울 강북구는 우이동 338번지 일대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미수습 유해 15구와 총탄류 등 유류품 44점을 발굴·수습하고 1월 30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추진한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발굴 조사는 삼한문화재연구원이 맡았다.

삼한문화재연구원은 "다수의 탄약류가 출토된 점, 유해 세척과정에서 흙을 털어내는 중 뼈에 접해 탄두가 확인된 점 등을 보면 희생자들은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9·28 서울 수복 후 부역혐의자들을 색출·학살하던 때 같은 이유로 우이동에서 학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아산 21구, 서산 11구 유해발굴… 선감학원서 치아 210점 출토



진실화해위원회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지난해 두 번째로 위원회 자체 유해 발굴을 추진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유해 21구, 충남 서산시 갈산동에서 유해 11구,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에서 각각 치아 210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 서산시 갈산동 유해발굴 전경.

## 적대세력 희생·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시작 "의미 깊어"

그동안 보도연맹 사건과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치중한 유해 발굴을 적대세력 희생 사건(군산시 신관동)과 인권침해 사건(안산시 선감동)까지 넓혔다. 부역혐의 희생 사건(아산시 배방읍, 서산시 갈산동, 여주시 북내면, 삼척시 상맹방리, 울진군 고성리), 국민보도연맹 사건(예산군 오가면) 관련 8개소 유해발굴은 2024년 5월 초 모두 마무리 짓게 된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대상지인 전북 군산 신관동 유해발굴 결과 유해나 유품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점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안산 선감동은 인권침해 사건으로는 처음 시도한 유해발굴로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다. 그 결과 치아 210점, 유품 27점, 분묘 44기를 확인했다. 해당 지역의 토질은 산성으로, 발굴된 유해는 모두 치아 일부만 남아 있었다. 치아 분석 결과 매장된 유해의 나이가 대부분 어린이·청소년(12~15세)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2022년 봉분 5기의 시굴로 출토된 치아(치아 68점, 16~18세)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유품 7점도 함께 출토됐다.

또 출토 유품 중 허리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물끈 1점이 발굴됐는데 크기는 약 50cm에 달했다. 만약 허리띠로 사용됐다면 당시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의 열악한 영양 공급이나 성장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유품이다.

이번에 확인된 분묘 44기의 크기와 분포도 주목된다. 가장 길이가 짧은 분묘는 85cm(85~205cm/평균 155.4cm)로 미성년자가 매장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분묘 깊이는 최소 17cm(17~164cm/평균 50.7cm)로 정식 분묘는 아니며, 그중 2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

는 발굴 지역과 연결된 배수로 시설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해당 대상지 하단부에도 추가 분묘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발굴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성년자가 암매장됐고, 분포 범위는 조사가 진행된 곳을 넘어서서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다.

## 아산서 유해발굴 "부역혐의 희생 확인"
## 지자체 지원 사업주체 다각화

아산지역 유해발굴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돼 유해 21구가 발굴됐다. 유해가 발굴된 곳은 2022년 발굴 지점과 이어지는 곳이다. 희생자는 팔이 몸의 뒤쪽으로 꺾여 있거나 다른 희생자와 신체 일부가 겹친 모습이었다. 매장 당시의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거꾸로 고꾸라지거나 기대어 앉은 모습, 손이 몸 뒤쪽으로 묶인 듯한 모습으로 출토됐던 양상과 비슷하다.

2023년 유해발굴은 부역혐의 희생 사건, 보도연맹 희생 사건, 적대세력 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관련 사건의 다양성은 물론 위원회 자체 유해발굴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주체를 다각화했다.

올해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부역혐의 희생 사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상지가 희소한 적대세력 희생 사건 발생지 중 2023년 진실규명된 영광 적대세력과 관련된 지점을 포함할 예정이다. 적대세력 유해 발굴 대상지가 희소한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유해를 대부분 수습했기 때문이다. 또 영광 적대세력 희생 사건 유가족의 증언이 일관성 있고 지점도 특정되므로 행정절차가 완료돼 유해발굴을 진행한다면 유가족 확인과 더불어 신원확인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실화해위원회 2023년 유해발굴 현황(5개 지역 8개소)

| 지역(관련 사건) | 발굴 면적(㎡) | 추진경과 |
|---|---|---|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37-1(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 900 | 2023. 9. 21.~10. 25. ※ 개토제 9. 21.<br>봉분 44기 조사(절개법 13기). 치아 210점, 유품 27점 발굴 |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44, 653, 883(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 600 | 2023. 10. 30.~11. 17. ※ 개토제 10. 30.<br>유해 약 21구 발굴(분석 중) |
| 충남 서산시 갈산동 산 2-87번지(충남 부역혐의 희생 사건) | 200 | 2023. 12. 27.~2024. 1. 12. ※ 개토제 12. 27.<br>유해 약11구 발굴(분석 중) |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예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105 | 2023. 10. 13.~10. 18. ※ 개토제 10. 14.<br>유해·유품 미발굴 |
| 경기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5(여주 부역혐의 희생 사건) | 400 | 2023. 12. 18.~12. 22.<br>유해·유품 미발굴 |
| 전북 군산시 신관동 군산대 공대 2호관(군산 적대세력 희생 사건) | 200 | 2024. 1. 5.~1. 31. ※ 개토제 1. 7.<br>유해·유품 미발굴(녹슨 철제, 군용전선 확인) |
| 경북 울진군 울진면 고성리 산87(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 - | 2023. 11. 18, 2024. 1. 15. ~<br>산 86번지 시굴, 증언 청취 후 87번지 추가 확인 중 탄피와 유해 식별 |
|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466-10(삼척 부역혐의 희생 사건) | - | 2024. 3. 11.~ |

# 사진으로 보는 진실화해위원회

**2024. 1. 2.**



2024년 진실화해위원회 시무식

**2024. 1. 3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면담

**2024. 2. 1.**



진실화해위원회 신규 임용 공무원 직무교육

**2024. 1. 9.**



70차 전체위원회

**2024. 2. 13.**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면담

**2024.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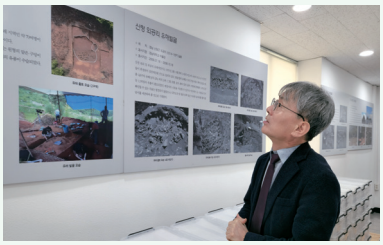
시국사건관련임용제외교원원상회복특별위원회 간담회

**2024. 2. 2.**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면담

**2024. 3. 4.**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안치시설 세종 추모의집 방문

**2024. 3. 4.**



대전 산내 골령골 현장방문 후
유족회 간담회

**2024. 3. 5.**



옛 대전형무소 터에 있는
반공애국지사추모위령비 헌화

**2024. 3. 5.**



한국전쟁 중 기독교 집단희생
순교지 방문

**2024. 3. 14.~15.**



4차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워크숍

**2024. 3. 14.**



국립3·15민주묘지 참배

## 자문위원 15인 위촉 배·보상 입법, 과거사재단 설립 논의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5차 자문회의를 갖고 자문위원 15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5년 11월까지다.

이날 자문위원으로 강경선 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정 변호사, 박인환 변호사, 신희석 전환기정의 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창수 법인 권사회연구소 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 장금현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하은정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어진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진실규명 결정 사건 관련 배·보상법 입법,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사진>.



## '안기부 불법구금 사건' 국정원에 자료제출 명령 의결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23일 71차 전체위원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사학자인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은 1981년 8월 간첩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 전주분실에 일주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2022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국정원에 수사 자료, 당시 직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가해자인 조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날 자료 제출 명령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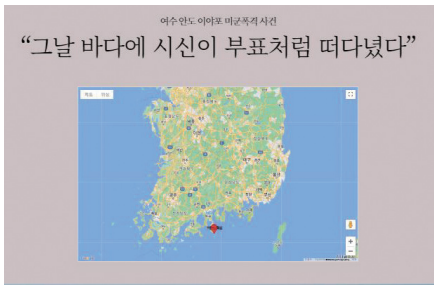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특별페이지 개설

진실화해위원회는 1·2기 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누리집에 '별이 되어 빛나는 진실을 전합니다' 제하의 특별페이지(https://jinsil.go.kr/KoreanWar.do)를 개설했다.

특별페이지에는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미군 폭격 사건,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부역혐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37건이 실려 있다. 일하던 삼베저고리 차림으로 경찰의 부름을 받고 삽짝문을 나서던 아버지, 밤에는 빨치산에게 고초를 겪고 낮에는 경찰에게 위협을 당한 산골짜기 마을의 농부들, 미군 비행기를 보고 반가워서 손을 흔들다 갑작스러운 폭격에 가족을 잃은 10대 소년 등 수많은 전쟁의 희생자들이 등장한다.

특별페이지에 담긴 증언, 사진, 지도는 '별이 되어 빛나는 진실을 전합니다'를 읽는 이들에게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전해준다. 이야기와 관련된 증언이 링크로 연결돼 있고, 희생 현장 등을 표시한 구글 지도가 페이지마다 삽입됐다. 보고서에 실린 중요 기록과 현장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다.




## 항일의병활동 윤상형 지사 건국훈장 포상 '환영'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의병활동가 윤상형 선생이 3·1절 105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포상받은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28일 김광동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권고 조치를 이행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6월 '윤상형의 항일의병활동'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후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 결정 사건 중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에 해당한다.

## 삼청교육 피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103개 사건 결정서 전문 공개

###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과 국회 보고
### 항일독립운동 4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38건, 적대세력 사건 18건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성과를 상세히 담은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사진>를 발간했다. 조사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총 103개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섯 번째로 발간한 이번 조사보고서는 2023년 7~12월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과 사건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발간과 함께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보고서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23년 하반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고한 사항이 수록됐다.

조사보고서는 위원회 주요 활동을 담은 총론(제1권)과 103개 사건 결정서 전문(제2~16권)으로 구성됐다. 사건유형별로는 항일독립운동 4건(제2권),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38건(제3~9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8건(제10~12권), 인권침해 사건 14건(제13~14권), 확정판결 사건 17건(제15권), 3·15의거 12건(제16권)이 수록됐다. 주요 사건으로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3),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 실려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 향후 과제도 담았다. 조사기간 만료(2025. 5. 26.)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2만여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배·보상 입법, 권고사항 이행관리,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 등 화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진실규명 활동 → 조사보고서 → 2기 위원회)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항일의병 윤상형 건국훈장 포상 105주년 3·1절 맞아 언론 주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항일의병활동가 윤상형 선생이 국가보훈부로부터 105주년 3·1절에 건국훈장 애국장 포상을 받은 데 대해 주요 언론 보도가 잇달았다.

내일신문은 '진실위가 인정한 의병, 애국장' 제하 기사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항일의병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며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권고해 훈장 포상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뉴스1은 "'폭도'로 기록된 의병장, 손자의 집념 115년 만에 명예회복" 제하 기사에서 외손자 염동은 씨 인터뷰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부터 진실규명 결정까지 상세히 전했다. 뉴스1은 "의병 활동으로 형을 받은 지 115년 만에 윤상형 지사의 명예가 외손자의 발품과 전영숙 조사관의 집념으로 회복됐다"고 평했다.

## 진실규명대상자 손해배상소송 잇단 승소에 진실규명 결정 재조명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부마항쟁 체포→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기구한 운명 60대, 뒤늦은 배상" 제하 기사에서 부마(부산·마산)항쟁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에 잇따라 수용돼 7년간 고통을 겪은 A 씨의 삶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4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체는"A 씨가 명예를 되찾게 된 건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다. 2021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A 씨의 피해를 처음 인정했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선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실규명 결정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규명 결정을 잇달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고 한삼택 씨 무죄에 '항소'" 제하 기사에서 고 한삼택 씨의 자녀 등이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내일신문, 뉴스1, 한국일보, 한겨레



# 형제복지원 첫 국가배상 판결과 '지연된 정의'

**김명우**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팀장·
법학박사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 조사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찾은 진실이다.

## 수용 1년당 8,000만 원 지급 기준

진실화해위원회는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 문제·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와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다. 조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2월 7일, 2024년 1월 9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진실규명 결정에 근거해 1·2차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였던 26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인 부랑인 단속·수용의 근거가 된 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 침해”
## 40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 법무부 항소 “판결 뒤집힐 가능성 낮아”

무부 훈령이 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적법 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위법해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 훈령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주 어린 아동들이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지 못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는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들의 허가·지원·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수용 기간 1년 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현재 피해자의 정신장애 유무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가산해 피해자별 위자료를 정했다.

### Lex Dilationes Abhorret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난 1월 10일 법무부는 여러 건의 형제복지원 관련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배상 금액의 적절성, 관계자 간의 형평성 등에 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어 2024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려진 또 다른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항소한 상태다.

이번에 내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서 사용된 배상액 산정 방식은 기존의 국가배상 사건 재판부들이 사용한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ationes Abhorret)”라는 오래된 법언(法諺)이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40년 세월을 기다려 왔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 뮌헨올림픽 테러 과거사정리위 본격 가동 "진실 추적"

**최웅식**
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1972년 9월 5일 20차 하계 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던 독일 뮌헨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다.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검은 9월단' 소속 단원 8명이 올림픽선수촌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이스라엘 선수단이 묵고 있던 숙소에 침입해 선수단 11명 중 2명을 현장에서 살해하고, 9명을 인질로 잡아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독일 당국이 펼친 구출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인질 9명 전원과 독일인 경찰관 1명 그리고 테러범 8명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체포됐다.

## 올림픽 테러 반세기 만에 진실규명 착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대회 중에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지자 주최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추도식을 열었다. 그러나 대회는 추도식이 있던 날에 곧바로 재개됐다. 정치권 또한 본래 일정으로 돌아가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독일 정부 당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십 년간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이 사건은 200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뮌헨'을 통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영화는 주로 사건 발생 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벌인 작전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한 독일 정부 당국의 책임은 근래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가 당시 희생된 이스라엘 선수단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합당한 배상액 등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독일 정부 당국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이 빚어져 오다 2022년 9월 5일 '뮌헨올림픽 테러 50주기 추모식'을 며칠 앞두고 양측은 과거사의 진상규명, 책임 인정 그리고 배상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50주기 추모식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은 추도 연설에서 당시 독일 정부 당국의 거듭된 실책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연방대통령은 유족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으며, 유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음은 필자가 번역해 ≪인권연구≫ 제5권 제2호에 게재한 해당 추도 연설문의 일부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크나큰 비극과 삼중 실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경기 준비와 안보에 대한 구상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 실패는 1972년 9월 5일과 6일에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됩니다. 세 번째 실패는 테러 공격이 있던 다음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침묵, 심리적 억압, 그리고 망각이 그것입니다!"*

독일 연방대통령은 나아가 사건과 관련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스라엘-독일 역사가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뮌헨올림픽의 참극’ 총체적 진실규명 한창**
**독일-이스라엘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
**유족들 “‘진실을 알 권리’ 누릴 길 열렸다”**

## ‘기억문화’ 공개토론… 활동 기간 3년

이에 따라 독일 연방내무부는 2023년 4월 21일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 기간 중 발생한 이스라엘 선수단에 대한 테러 사건 국제과거사정리위원회’(일명 ‘1972년 뮌헨올림픽역사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주로 독일과 이스라엘 양국 출신의 저명한 역사학자 8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당시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테러를 둘러싼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역사도 포괄적으로 조사·연구하기로 했다.

2023년 5월 30일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낸시 패저 독일 연방내무부 장관은 “진상규명, 과거사정리, 투명성 그리고 책임을 지는 일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결여돼 있었다”라고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3년 5월 열린 ‘1972년 뮌헨올림픽역사가위원회’의 1차 회의.
@독일 연방내무부 Mastodon 계정

연방내무부는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 그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뮌헨-베를린현대사연구소에 위탁했다. 위원회는 또한 업무 추진 현황을 간행물과 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위원회는 2023년 9월 6일 “1972년 뮌헨 - 분열된 추모? 독일과 이스라엘 기억문화에서의 올림픽 테러 사건”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은 위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과제다.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포착된 테러에 대한 경고나 징후는 왜 간과됐는가? 대회 기간에 독일 정부 당국의 치안은 왜 이토록 부실했는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구출 작전에서 살아남아 체포된 테러범 3명은 왜 얼마 되지 않아 추방되고, 심지어 기소조차 된 적 없었는가? 사건에 관한 기록물들은 왜 수십 년간 봉인된 채 보존되거나 그 존재마저 부인됐는가?***

이번 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일 독일 정부 당국의 부실한 대비, 위기를 관리하고 사태에 대응한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태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독일 정부 당국의 책임을 밝힐 기회다.

현재 위원회는 당시 기록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범행에 대한 테러범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독일 정부 당국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떠한 후속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라도 피해자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 공영장례 서약식



진실화해위원회가 현재 직권조사 중인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1월 23일 부산 동구 반빈곤센터에서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공영장례 서약식'을 열었다. 공영장례는 부산시가 지원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장례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이웃이나 친구가 상주가 돼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날 "사망할 경우 사후 처리와 장례 절차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썼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결과 진실규명 결정이 난 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다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유언장에 포함했다. 부산지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주언 변호사가 유언장이 민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다. 이날 전상규 사진작가가 촬영한 6명의 영정사진**<사진>** 전달식도 가졌다.

손석주 대표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의 30%가 무연고자인데다 대부분 60대 중반 이상 고령이다. 병약자도 많은 편"이라며 "마지막 가는 길에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서약식을 준비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도 만나 공영장례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영화숙·재생원은 형제복지원의 모델이 된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집단수용시설이다.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이들이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8월 1, 2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한 후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결성 "국가폭력 피해 고발"




부산지역 아동수용시설인 덕성원 입소자들이 2월 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알리는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결성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사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의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연대의 의미로 자리를 함께했다.

덕성원은 한국전쟁 시기 운영을 시작해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다 2000년 문을 닫은 아동수용시설이다. 피해자들은 2월 22일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총괄하는 이상훈 상임위원과도 면담을 가졌다.




# 조사기간 1년 연장

##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등치 때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피해자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 신청안내

**접수 기간**

2023. **4. 24.** ~ (공휴일 제외) 우편 및 방문제출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

**신청 자격**

1기 진실화해위원회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신청 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사본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el: **02-3393-9700**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